

북한의 대외경제관리체제에 관한 일고찰

- 중국과의 비교 -

박 정 동*

- I. 서 언
- II. 김정일 체제의 경제개혁
- III.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 IV.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북한 체제의 변화 및 전망
- V. 결 언

요 약

북한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예로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개성에 지난 22개월 간 1억8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북한에 자본주의 싹이 돋아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개성공단 시범단지내 남한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서는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달러로 지불하고,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동 지역의 장기적 계획에 따라 2020년경 놀이공원까지 들어서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는 단시일내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경제위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겨 해결하고자 한다면 개혁개방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중 가장 성공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한 중국과 베트남을 모델로 삼아 경제체제 개혁을 이 행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된다.

*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I. 서 언

북한경제는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체제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택한 정책은 2002년 7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라고 불리는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와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통한 외자도입이었다.

먼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 북한이 내세운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쌀 배급제 폐지, 대폭적 물가인상, 근로자 임금인상, 국제환율인상, 기업의 자율권 확대, 개인 경작지 확대 등으로 이는 가히 획기적인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은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통한 외자도입에 관한 내용으로 북한은 1997년 4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정식 가입 신청서 제출, 1997년 9월 IMF 조사단 초청, 그리고 1998년 12월 IBRD 조사단 방북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는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제개혁에 대한 노력을 전개하고자 하는 북한의 행보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효과적으로 시장경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와 진입할 수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에 관해 중국의 大公报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하여 보도하였다¹⁾. 첫째, 확고하지 못한 개혁이며 시장경제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으로서 이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일부 고위 관료들이 견지하는 태도로 북한은 언제나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므로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개혁 실시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으로서 이는 현재 북한의 경제개혁 실시는 외교관계의 필요에 따른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북한이 경제개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수십 년 동안 농민시장 정책은 몇 차례나 부침을 반복해왔는데 어떤 시기에는 농민들의 자유로운 농산물 판매를 승인하다가 어느 때는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1991년 북한은 나진선봉에 자유경제특구를 설립하여 중국, 러시아와 무역확대를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홍콩 기업이

1) KOTRA, 「北 경제, 시장경제 진입 가능한가?」, KOTRA 북한경제속보, 2004. 6. 1일자 내용정리.

설립한 도박장과 몇몇 일본회사들이 세운 소규모 공장을 제외하곤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02년 9월 북한 당국이 북중간 변경지역 신의주에 홍콩식 자본주의 천국을 건설하겠다고 공포하였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미비한 상황이다.

셋째, 효과적 개혁의 실시로 퇴보의 길은 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서는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견지하는 태도로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을 확신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총면적 6,000평방미터의 통일시장을 예로 들어 이 시장이 평양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 정부가 평양시 중심부에 두 번째 자유시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러한 대규모 시장은 이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과거에 주민들은 매일 수표를 받아 국영회사에서 직접 상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수표배급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이 현금으로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수표 구입과 현금 구입간의 가격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은 여전히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내세운 개혁조치에 대해 반드시 성과를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경제개혁에 관한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이 큰 걸림돌이 되어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시각은 서서히 불감증에 가까운 견해로 집약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보에서 볼 수 있듯이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으로 볼 때 가까운 미래에는 확실한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재 북한의 경제개혁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파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경제개혁이 2003년과 2004년의 대외무역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보다 먼저 경제체제의 개혁을 한 중국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고,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속에서 북한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고는 이런 쟁점들을 규명하기 위해 I장을 서언으로 하고, II장에서는 김정일 체제의 경제개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III장은 북한의 대외경제체제의 변화를 통해 경제개혁으로 인해 대외무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V장은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가 북한경제 개혁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며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김정일 체제의 경제개혁

1. 김정일 체제 개막의 의미

김정일은 1974년 당조직 부문을 담당하면서 김일성 다음가는 실력자가 되었고 80년 제6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의 권력승계자로서 공인되었다. 따라서 80년 이후 북한은 「김일성 시대」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로 이행하였으며 이 시기의 김정일은 이데올로기나 영화, 예술 등을 포함한 선전·선동부문을 계속 담당하면서 평양시 건설이나 기념비적인 대건축물 축조를 총 지휘해 왔다. 또한 그는 경제분야에서 인민소비품 생산의 증대를 통한 소비생활 향상에 주력하면서 경제운영에서는 이른바 「속도전」방식을 주도해 왔다.

91년 인민군 최고사령관, 93년 국방위원장에 취임함으로써 김정일은 권력의 가장 핵심인 군사부문을 이어받아 권력승계의 마지막 과정을 밟았고, 94년 7월 김일성주석의 사망이후 당과 국가의 최고지도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김일성 사후 현재까지 북한체제는 「김일성-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일 체제」로의 과도기로 규정지을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후 4년이 지난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 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일 당총비서를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면서 북한의 권력승계는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와 같이 김정일 시대의 개막은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²⁾. 김일성 사후 식량난을 위시한 경제난에 따른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과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성이 외부에서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권력승계를 통해 이러한 시각을 일축하고 체제가 아직도 확고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다.

둘째, 권력기관 간 역할분담으로 정부 및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할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대폭적인 권력구조 개편으로 국방위원회가 사실상의 최고권력기간이 되는 등 군부 우위의 국가관리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정책 집행에서는 당·정·군의 권력기관 간에 역할 분담이 다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의 발족은 더욱 악화일로에 봉착한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이 가장 큰 걸림돌로 부각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정일 체제가 제시한 비유는 「고난의 행군」이다. 이는 김일성이 쌓아 올린

2) KOTRA, 「북한알기」, 2004.

모든 것을 바꿔 북한체제에서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서 김정일 체제는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켜 체제 내부의 변화를 경제부문에 한정시키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체제 완화조치를 이끌어내고 일본과의 수교 교섭을 통해 배상금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여전히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앞서 언급했듯이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 등의 구호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단속하며 체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선군정치」, 「강성대국」을 부르짖으며 현 상황을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널리 선전하는 자력갱생을 주력으로 하는 자립적 민족경제체제로는 모든 자원과 내부예비가 고갈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은 결국 외국투자유치 및 지원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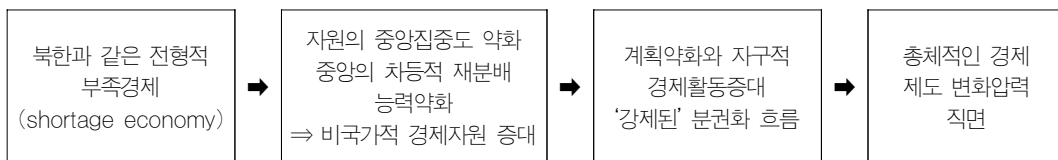
이로 인한 향후 북한체제의 진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2.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및 일련의 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조치들

김일성은 “사회주의시장이 아니라 자본주의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무역을 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도 무역방법을 그에 맞게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며 “변화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하여 대외무역에서 전환을 일으킬 것³⁾”을 요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보듯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사회주의 몰락을 목격하면서 90년대 초반부터 더 이상의 사회주의 무역시장은 무의미하며, 자본주의시장을 상대로 한 무역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내부의 참혹한 식량난과 경제난

〈표 1〉 90년대 이래 북한 계획경제의 제도적 변화



자료 : 정세진, “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경제 변화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집』, 제43집 1호, 2003, 211쪽 〈표〉재인용

3) 김진향, “북한경제의 위기와 대응 :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본질과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26집(2003), 114쪽 재인용.

으로 그동안 북한식의 경제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은 악화된 경제상황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체제의 존속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의 시작과 더불어 경제적 변화의 상징적 노력들 가운데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그 한계점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금강산 관광특구», 「개성공업지구」 지정 등으로 대표되는 상징적 변화들에 대해 간략히 분석하고자 한다. 분명한 것은 전자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기본적인 북한 사회 내부의 생산적 예비를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한 조치였고, 후자는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성공적으로 일으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다는 것이다.

(1) 「7·1 경제관리개선조치」

1)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⁴⁾

① 가격 및 임금정책의 변화

최근 북한이 시행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중 가격체계의 개혁은 새로운 가격기준의 설정과 가격제정원칙의 변경에 따른 모든 가격과 요금의 인상으로 구분된다⁵⁾. 첫째, 가격기준을 석탄과 전력가격과 같은 기초원료 가격에서 식량(쌀)가격으로 변경하여 식량가격을 기초로 다른 상품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가격기준을 새롭게 세웠다⁶⁾. 둘째, 가격제정원칙은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에 따라 결정되는 원칙과 같지만 가격제정에서 국가의 개입이 축소되고 국제시장가격이 고려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것을 매우 당연한 경제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북한의 주요 상품가격 및 요금수준의 변화와 인상률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쌀 가격을 포함한 전반적 물가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kg당 8전이던 쌀 가격이 대체로 시장 가격수준인 44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률이 48.78배에 달하였다.

4)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2002년 5월 11일 “가격 및 생활비를 개정할 데 대하여”라는 내각지시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7·1조치」에 대한 기본방향과 대략적인 내용은 알려졌다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아직까지 없다.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1)”, 『사회과학논문집』 제15호, 『KDI북한경제리뷰』, 2002년 10월호에서 재인용.

5) 조영기, 『김정일 시대의 경제관리정책의 특징』, 건국대학교, 2004, 11쪽.

6) 조선일보가 입수한 ‘북한내부문건’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7·1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앞서 일선 당·정 부기관 간부들과 군관(장교)들에게 「7·1조치」의 당위성에 대한 강연 학습 자료용으로 ‘내부문건’을 배포하고 ‘내부문건’을 활용하여 「7·1조치」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교육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일보, 2002. 10. 16. 내용 재인용.

〈표 2〉 주요 상품가격 및 요금수준의 변화와 인상률

항	목	이전의 가격(원)	개정된 가격(원)	인상률(배)
쌀(kg)	수 매 가 격	0.82	40	48.78
	판 매 가 격	0.08	44	550.0
옥수수(kg)	수 매 가 격	0.49	20	40.82
	판 매 가 격		24	
콩(kg)	수 매 가 격		40	
	판 매 가 격			
세	숫 비 누(개)	3.00*	20	6.67
남	자 운 동 화(컬레)	18.00	180	10.0
석	탄(톤)	34.00*	1,500	44.0
전	력(천kW)	35.0*	2,100	60.0
회	발 유/옥 탄 가 95(톤)	922.86*	64,600	70.0
(공업제품가격평균인상률)				25.0
월	간 잡 지(조선문학)	1.20	35	29.17
지	하 철 요 금(전구간)	0.1	2	20.0
탁	아 소 간 식 비(월액)		300	
송	도 원 해 수 옥 장 입 장 료	3.0	50	16.67

주 : *는 인상률(배수)로부터 역산한 값

자료 :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1)”, 『KDI 북한경제리뷰』, 2002년 10월호에서 재인용

이러한 쌀 가격의 대폭적 상향조정과 함께 임금도 20~40배 정도 인상하였다. 기존의 200~300원 하던 생산자의 임금을 4,000~6,000원으로 인상하고, 각종 생활비를 현실화했는데 임금의 조정폭은 노동의 강도와 비례해서 채취, 전력, 금속, 철도, 운수 등 기간산업 노동자들의 임금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주의시장이 존재했었던 예전에

는 원유가 1톤당 20루블에 충분히 공급되었으나 이제는 그 수십 배의 가격으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공산품값은 여전히 제자리인 모순과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더불어 전체 경제구조의 균형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는 필요성에서 제반 물품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⁷⁾

경제개혁을 먼저 실시한 중국의 경우 4단

7) 김진향, 앞의 글.

계에 걸쳐 가격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⁸⁾ 1단계(1978~84년)의 출발점은 79년 11월 양곡, 야채 등 18가지 주요 농·축산물의 수매가격을 24.8% 인상한 것이었다. 이번 북한의 조치와 비교하면 인상폭은 작지만 가격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이어 중국 정부는 82년 1백60종의 공산품을, 83년에는 3백50종의 상품가격을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였다. 2단계(85~89년 상반기)는 주요 생산재에 대해 이중가격제를 실시한 시기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이번에 쌀 판매가격을 현실화했지만, 중국과는 달리 현재로서는 시장가격과 근접시키고자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국정가격만 존재한다. 앞으로 이런 수준과 범위의 가격개혁이 얼마나 실효를 가져올 수 있을지의 문제는 더 두고 볼 수밖에 없다.

② 중앙계획체제의 변화 : 분권화

이번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는 경제관리 전반에서 사실상 계획체제의 분권화가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계획 작성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하지만, 나머지는 해당기관 기

업소에서 하도록 하였다⁹⁾.

계획체제의 분권화와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북한은 독립채산제의 실질적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기업, 공장들이 국가에 지고 있었던 모든 부채를 전면 탕감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자신의 실정에 맞게 지정된 품목의 생산량과 질을 자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 초반까지도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이 거론되었다¹⁰⁾. 그러나 2001년 10월 김정일의 문건이라 이제 “계획지표의 세분화는 각 기업소가 자기 단위의 현실에 맞게 해나가는 원칙”이 되고 있다. “국가계획의 범위 내에서 자체로 결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이로서 사실상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이 폐기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북한이 경제난을 겪어온 이래 계속되어온 하부 단위들의 자력갱생을 강조해 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된다. 후속조치들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처럼 경제전반에서 제도적으로 분권화를 시도하는 것은 중앙에 과도하게 정책결정권이 집중됨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

8) 정세진, “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경제 변화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집』 제43집 1호, 2003, 212쪽.

9) 정세진, 앞의 글.

10) 김명철, “생산의 정상화 보장을 위한 공업기업소 전투계획화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제2호, 2001, 15~18쪽; 리동구, “경제를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본성적 요구”, 『경제연구』 제4호, 1998, 9~12쪽; 정세진, 앞의 글.

〈표 3〉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구 분		조 치 전	조 치 후
시 장 기 능 강 화	가 격	·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엄청난 격차	·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에 근접하게 인상
	임 금	· 110원/월	· 2,000원/월(18배 인상) (노동력을 계획부문내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
	가격설정	·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가격설정 · 설정기관 : 중앙 및 지방행정 기관	· 생산원가, 국제시장가격, 국내수요 · 공급을 고려 · 설정기관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이외에 지방공장에 대해 가격설정 재량권을 제한적으로 부여
	원부자재 시 장	· 원부자재 거래는 시장이 아닌 공장, 기업소 간 계약에 의해서만 가능	· 원부자재 시장 개설(시장범위의 확대, 공장 가동을 높이는 수단) · 교역물자의 종류와 범위는 국가가 규정
	환 율	· 1달러=2.16원	· 150~190원(암시장 환율 200원에 근접) · 외화가치 산정에 시장기능 활용
분권화	계획수립	·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에 의거, 계획 수립 권한이 '국가계획위원회'에 집중	· 주요 사업은 '국가계획위원회' 결정 · 세부사업은 해당기관, 기업소, 지방행정기관이 수립
	공장 · 기업소 경 영	· 독립채산제의 느슨한 운영(원자재 등을 국가에 의존하려는 경향) · 원가개념 부족 · 생산전문성 부족(자력갱생의 원칙하에 각 기업소가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 생산하는 경향)	· 독립채산제 강화(부족한 원부자재는 해당 공장 · 기업소가 자체 해결) · 원가개념 강화(자금, 물자, 노동력 투입 대비 실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 방법과 계산체계를 수립) · 생산전문화 유도
분 배 방 식 개 선	분배방식	· 평균적 분배주의 팽배 · 일한 것만큼 분배 받는다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유명무실	· 공장 · 기업소 '수익성'을 기준으로 실적평가 · 평균주의 배제(수익성 높은 공장 · 기업소는 많은 수입을 분배, 노동자에게 상여금 지급)
	사회보장 체 계	· 식량, 소비재, 주택 등을 거의 무상공급	· 식량, 소비재, 주택 등에 대해 제값을 지불하도록 조치. 단, 무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등은 유지

자료 : 정세진, "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경제 변화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집』 제43집 1호, 2003, 214쪽 재인용.

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화폐임금제와 인센티브제의 도입

북한은 임금인상과 더불어 생산단위의 노동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서 북한에서 분배의 차등화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생산계획량을 초과하여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매해 줌과 더불어 그 대부분을 생산자가 직접 가져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기존에는 계획량의 70%만 달성

〈표 4〉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임금인상 주요 내역

(단위 : 북한 원)

구 분	품목/계층	단 위	국정가격조정		
			조정전(A)	조정후(B)	인상폭 (B/A, 배)
임 금	생산노동자	월	110	2,000	18
	탄 부	월	300	6,000	20

자료 : 김진향, “북한경제의 위기와 대응: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본질과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26집, 2003, 18쪽. 재작성.

하면 국가는 100% 기본노임을 지급했으며, 생산계획을 턱없이 모자라게 하더라도 60%의 노임은 국가가 지급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의 결론은 적극적인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적 생산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놀고먹는 사람들을 없애고, 더불어 일한만큼 벌수 있게 한다는 인센티브의 적극적 도입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게 하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아무튼 이번 조치를 통해 임금과 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생산관리체계의 일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으며, 이로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임금 및 가격현실화에 연동되는 사회보장체계의 부분적인 개편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식량 및 생활용품, 주택, 전기, 물 등 인민경제 기본생활품들에 대해 국가가 국정가격을 적용하여 거의 무상에 가깝게 공급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실제생산비에 준하는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배급제에 의한 식량공급이 실제로 폐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민시장의 경우처럼 자재공급 부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자재를 사고 팔 수 있는 물자교류시장을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사회 전부문에 걸쳐 진행할 수 있도록 IT산업의 적극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2)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과 효과

①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

북한의 금번 조치들로 인해 경제관리부

문·단위들에게 경제적 타산의 원칙을 강조하였고 경제활동이 실리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한다¹¹⁾.

첫째, 가격제정체계의 개혁에 대해 북한은 식량가격을 가격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식량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식량의 국정가격과 농민시장의 이중가격¹²⁾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식량가격의 인상폭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타 상품가격의 인상폭을 희석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은 금번조치 이전까지 식량의 수매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가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였다. 따라서 이 조치는 대폭적 가격인상과 함께 판매가격을 수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주의 분배원칙과 관련하여 대폭적 임금인상조치는 상품가격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구매력을 유지해 주기 위한 조치였다. 경제난으로 배급체계가 마비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은 농민시장으로부터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받아온 현실에서 기존 임금은 구매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노동에 관심을 가졌으나 임금의 현실화를 통해 국가경제관리체제로 주민들을 다시 유입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임금과 가격을 동시에 인상한 것은 임금범위 내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조치로 국가배급제도의 대상과 기준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화폐경제로의 진입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금번 조치를 통해 계획권한의 일부를 하부기관으로 이양하였다. 이는 북한 공식경제의 계획수행률이 매우 낮고 사경제부분의 이상팽창으로 계획경제에 대한 당국의 통제체계가 마비된 상태에서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②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효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체제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¹³⁾ 첫째,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와 소득분배개선 효과이다. 소득분배개

11) 리창혁, “우리 당에 의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고수와 경제강국건설의 성과적 추진”, 『경제연구』 제4호 11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2001, 3쪽.

12) 최근 북한의 농민시장에서 형성된 쌀의 가격은 1998년 77원, 1999년 64원, 2000년 46.6원, 2001년 49.5원이었다. (통일부, ‘2001년도 북한의 물가동향 조사결과’, 2001. 12. 14) 반면 주민에게 판매되는 가격은 1946년에 제정된 8전이다.

13) 김진향, 앞의 글.

선 효과로서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분명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평균주의와 공짜를 없애고 무노동무임금을 전면화함으로써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필요악으로 간주되던 장마당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생산성 증대와 관련한 또 하나의 가시적 성과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북-중, 북-일간 무역규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대중국, 대일본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수출액은 중국과는 전년 동기 대비 62%의 큰 증가를 보였다. 물론 이러한 수출증대의 원인에는 또 다른 요인으로써 종래의 가격구조 왜곡에 기인한 공장, 기업소들의 수출기피현상이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둘째, 독립채산제가 강화됨으로써 각종 기관 및 공장 등은 수입과 지출에서 수입부문의 증대를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북한경제에서 각급 생산단위가 발생시킨 손실부분을 국가가 책임져 주던 것을 이제는 해당 단위의 직접 부담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 각급 단위의 수입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 주민들 스스로 수입과 지출 내지는 월급에 대한 시장경제적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큰

변화로서 국가가 주택, 식량, 기본 생활용품 등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책임지지 않고 주민들은 스스로의 월급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월급에 대한 기본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인해 북한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변화도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는 국내외적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편승하고자 북한경제의 제도적 변화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신의주 특별행정구 및 금강산, 개성특구 지정

북한은 체제개혁·개방의 일환으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특구, 개성공단 특구 지정 등에 대해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 중에 있다. 이들 현안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은 2002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하고,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한 바 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국제적 차원의 금융·유통·첨단과학기술 및 서비스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공적 수행을 뒷받침하는 거점도시로 삼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는 결국 외부물자공급의 확대와 외자유치 등이 필요한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서 북한의 변화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입과 그것을 통한 시장경제의 실험이라는 전략적 차원의 적극적 변화로 볼 수 있게 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양빈장관의 구속으로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대한 비전이 불분명한 시점에서 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원장은 작년 남한 방문에서 신의주 특구개발의 계속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양빈의 후임으로 전 싱가포르 수상 리관유를 비롯한 여러 국제적 유명인사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금강산관광특구에 관해 북한은 200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표하여 금강산을 실질적인 '국제적 관광특구'로 지정하였다. 관광특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¹⁴⁾, 금강산관광특구 안에서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하여 관광업(여행, 숙박, 오락 및 편의시설 등)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은 공해가 없는 첨단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할 수 있다(제21조)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관광업과 관련된 건설부문의 투자를 장려하고(제22조) 특구에서의 외화 반출입이 자유로우며(제24조)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서 관광특구의 관리기관을 구성(제12조)하고, 이 관리기관에 의해 관광계획의 작성, 관광자원의 조사와 개발 관리, 투자유치와 기업창설 승인, 등록, 영업허가, 토지이용권 건물의 등록, 관광지구 하부구조 시설물이 관리 등의 임무(제13조)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개성경제특구'로서 이는 북한이 2002년 11월 6일~9일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하여 11월 중순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였고, 12월 하순까지 공단착공식을 갖기로 하였으나 착공식은 미루어지다가 2003년 6월 30일에 개최되었다. 북한은 '개성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향후 남북경제협력 구도에서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이어지는 내륙의 경의선축과 신의주-남포-해주-개성-인천을 연결하는 서해안 축의 동시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개성특구기본법에는 토지이용권 및 시설물 소유권 보장, 인원, 물자, 자금 및 정보통신의 보장, 각종 규제간섭 배제, 각종 조세 공과금을 면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본법을 마련했다.

이와 같이 북한이 금번 조치 이후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특구를 지정한 것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

14) 김진향, 앞의 글, 23쪽.

〈표 5〉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개 성	신의주	금강산	나진·선봉
위 치		황남(동남부)	평북(북동부)	강원(동남부)	함북(북동부)
면 적		66km ²	132km ²	약100km ²	746km ²
특 구 지 정 일		2002.11	2002.9	2002.11	1991.12
특 구 개 념		공업단지	특별행정구	관광특구	경제무역지대
특구설립 목적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 개발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 개발	국제관광지	무역 및 중계수송, 수출가공, 금융, 서비스
자 치 권	범 위	독자적 지도 및 관리	입법, 행정, 사법	독자적 지도 및 관리	행 정
	입 법	-	입법의회	-	-
	사 법	-	구재판소, 지구재판소	-	-
	행 정	지도 및 관리기관	행정부(장관)	지도 및 관리기관	지대당국
토 지	소유주체	국 가	국 가	국 가	국 가
	개발주체	개발업자	행 정 구	개발업자	지대당국
	임차기간	50년	50년	-	-
사 용 화 폐		외 화	외 화	외 화	북 한 원
기 업 소 득 세		14%(장려분야 10%) ^{주)}	미정(혜택 부여 예정)	면 세	14%
비 자 여 부		무비자, 출입증명서 필요	비자발급	무비자, 출입증명서 필요	무비자, 초청장 필요

주 : 장려분야는 인프라건설, 경공업, 첨단과학기술 분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북한은 대내 경제 관리개선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를 도모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경제특구를 확대하여 생산능력의 향상을 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경제특구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들은 동일한 경제목표인 경제강국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경제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북한은 생산설비의 현대화, 식량 및 원자재의 도입 확대가 필수적이며, 국제

경제협력을 통한 대외관계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Ⅲ.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1. 2003년 대외무역 현황

1990년 이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북한은 2003년도 대외무역이 전년대비 5.8% 증가한 2,391백만 달

러로 1994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중 수출은 777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여 1999년 이래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비금속류 및 수산물 등 대중 수출의 증가와 주요 국가에 대한 섬유제품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교역에서는 2002년보다 38.6%나 증가하였고, 전체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중국과의 수출에서 395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46.1% 증가를 보였고, 수입에서도 34.3% 증가한 62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를 전체 교

〈표 6〉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합 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994년	858	-13.3	1,242	-25.0	2,100	-20.6
1995년	736	-14.2	1,316	6.0	2,052	-2.3
1996년	727	1.2	1,250	-5.0	1,977	-3.6
1997년	905	24.5	1,272	1.8	2,177	10.1
1998년	559	-38.2	883	-30.6	1,442	-33.8
1999년	515	7.9	965	9.3	1,480	2.6
2000년	556	8.0	1,413	46.4	1,969	33.0
2001년	650	14.9	1,620	15.2	2,270	2.6
2002년	736	13.1	1,524	-5.9	2,260	-0.4
2003년	777	5.5	1,614	5.9	2,391	5.8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 보고, 2004.

반면 수입은 1,61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5.9%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자원 수입이 급증하였고 비금속 및 기계,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 증가 등에 그 요인이 있다.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837백만 달러로서 전년의 790백만 달러에 비해 다소 악화되어 수입 비중이 훨씬 큰 대외무역구조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과의

역 규모로 볼 때 1,023백만 달러로 앞서 언급했듯이 38.6%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대외무역규모의 42.8%에 달하는 크기이다.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 증가를 보이는 품목으로는 꽃게, 조개 등 어패류와 금속제품, 섬유제품 등이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원유, 코크스 등 에너지자원, 냉동돼지고기 등 식량자원의 도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쌀이나 밀 등 곡물과 비철금속 등의 수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두번째로 일본과의 교역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 간 무역규모는 20년 전의 1/4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경제관계도 큰 타격을 받았다. 즉, 수출이 17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5.8% 감소하였고, 수입 역시 92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32.3% 감소하여 전체 교역액은 265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8.2% 감소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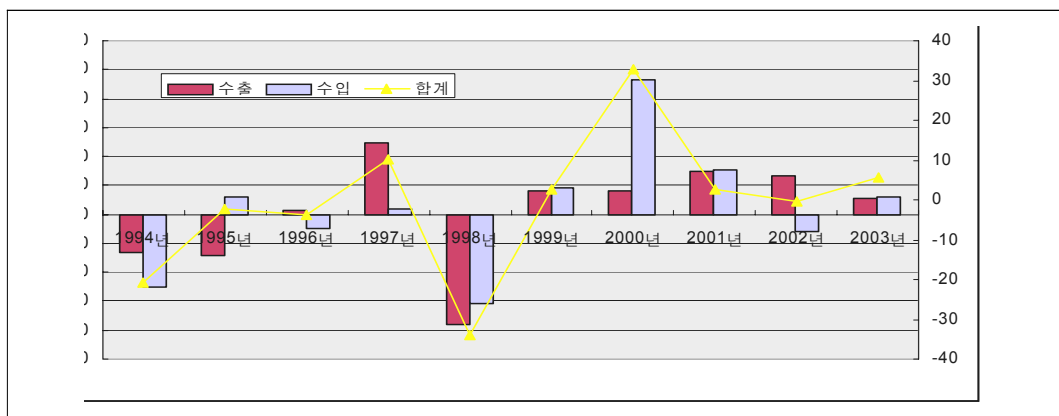
이처럼 일본과의 무역거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에는 무엇보다도 일본인 납치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북일간 정상회담 성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에 따른 양국간의 정치적 긴장이 경제교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은 주요 수출 품

목이었던 조개 및 게 등 어패류와 섬유제품이 크게 감소하였고 수입에서도 기계, 섬유, 비철금속제품 등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세번째로 태국과의 교역으로써 북한과 태국간의 관계가 꾸준하게 이어져옴에 따라 교역규모도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태국과의 총교역이 254백만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전년대비 17.4%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태국과의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는 기계류, 비금속제품 및 섬유제품 등의 수출과 기계류, 플라스틱제품, 화공제품 등의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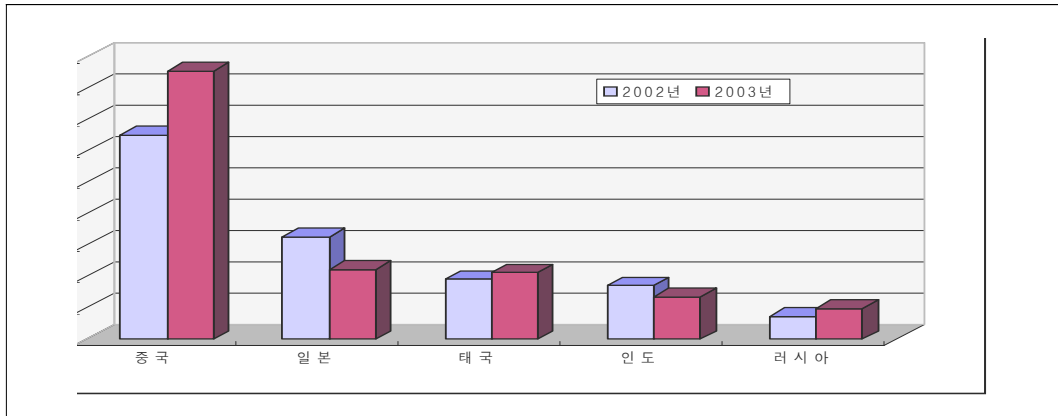
네번째로 인도와의 교역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수출이 2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66.2% 감소하였고 수입은 전년대비 18.4% 감소한 158백만 달러로 나타나 총 교역량은 160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6.6%

〈그림 1〉 북한의 대외무역추이



〈그림 2〉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



감소하였다. 수출에서 감소세를 보이는 품목으로는 기계류 및 화공제품이고 수입에서는 화공제품, 시멘트류, 곡물 등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의 교역은 2002년과 비교해 볼 때 수출은 부진한 반면 수입은 증가하였다. 수출은 3백만 달러로 전년보다 23.3% 감소한 반면 수입은 116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50.0% 증가하여 총 교역액은 전년보다 46.7% 늘어나 118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러시아와의 수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정제유를 대량으로 들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KEDO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악화된 에너지 수급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2003년 북한의 대외무역을 평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¹⁵⁾ 첫째, 1994년 이후 대외무역총액이 최고치에 달해 고난의 행군 이전 수준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외화획득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필요한 물자를 해외로부터 도입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북중 교역의 규모나 증가율이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2003년 전체 교역의 증가는 북중 교역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2년 이후 악화된 북일관계로 인해 북한의 대일 어패류, 섬유 등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5) KOTRA, 『북한 2003년 대외무역, 최근 10년 내 최대』, KOTRA 북한경제속보, 2004. 5. 19일자 내용참고.

〈표 7〉

2003년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계		점유율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1	중 국	271	395	467	628	738	1,023	32.6	42.8
2	일 본	234	174	135	92	370	265	16.3	11.1
3	태 국	45	51	172	204	217	254	9.6	10.6
4	인 도	5	2	187	158	191	159	8.5	6.7
5	러시아	4	3	77	116	81	118	3.6	4.9
5개국 합계		558	624	1,038	1,196	1,596	1,820	70.6	76.1
계		736	777	1,524	1,614	2,260	2,391	100.0	100.0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 보고, 2004년.

있는 반면, 이 품목들의 대중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식량 및 에너지 자원의 도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내부 식량난 및 에너지난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북한은 2003년 들어 러시아로부터의 정제유를 도입함으로써 대러 교역량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KEDO의 대북 중유 공급 중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코크스는 비금속제품의 수출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2. 2004년 상반기 대외무역현황

2004년 1/4분기 북한의 대중·대일 교역 규모는 256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하였다. 이중 수출은 110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7.1% 증가하였고, 수입은 146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2

% 감소하였다. 대중·대일무역에서 36백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대외무역에서 대중국 교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난 반면, 남북교역과 대일본 교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전통적 대중 및 대일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수산물, 의류, 광물성연료, 광석 등은 2004년 1~3월에도 수출을 주도했으며, 수입의 경우 식용육류, 광물성연료, 곡물, 전기기기 등 기존의 대중 수입 주종품목이 전체 수입액의 52.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좀더 자세하게 국가별 대외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 교역규모는 19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해 18.7%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수출은 87.9% 증가한 70백만 달러였고, 수입은 1.1% 줄어든 126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둘째, 대일 교역규모는 61백만 달러로

〈표 8〉

2004년 1/4분기 북한의 대중·일 교역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3년 1~3월			2004년 1~3월			증가율(%)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중 국	164	36	128	195	69	126	18.7	87.9	△1.1
일 본	73	50	23	61	41	20	△16.4	△17.1	△14.6
합 계	237	86	151	256	110	146	7.9	27.1	△3.2

자료 : 통일부, 2004.

16.4% 줄었으며, 이 가운데 수출은 17.1% 감소한 41백만 달러, 수입은 14.6% 줄어든 20백만 달러였다.

셋째, 1/4분기 남북교역규모는 104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118백만 달러에 비해 18.7% 줄어들었다. 이 기간 남한측의 반입은 62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57백만 달러에 비해 7.4% 증가했으나, 반출은 43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70백만 달러에 비해 39.7% 감소하였다. 또한 1/4분기 남북교역 중 상업적 매매 등 거래성 교역은 77백만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5.1% 늘었으나 대북지원 및 경수로, 금강산관광사업 물자반출 등 비거래성 교역은 27백만 달러로 50.4% 줄었다. 통일부는 올해 1/4분기 남북간의 교역액이 줄어든 것은 경수로 건설공사의 일시 중단과 인도적 지원물품의 반출감소 등 비거래성 교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며 '거래성 교역을 대상으로 한 실질교역수지는 북한이 46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전했다.

상품별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수출의 경

우 북한의 전통적 대중·대일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수산물, 의류, 광물성 연료, 광석 등이 2004년 1/4분기 중에도 수출을 주도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철강이 25백만 달러(245.9% 증가)를 기록하였고, 대중국 수출총액의 36%를 점유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참고로 철강 중 제강용 원자재인 선철이 14백만 달러, 385.5% 증가하였고, 고철은 7백만 달러, 382.6% 증가하였다. 그 외 수산물(10백만 달러, 40.0 % 증가), 광석(5백만 달러, 187.6% 증가), 광물성 연료(5백만 달러, 170.1% 증가) 등이 수출을 주도하였고, 의류는 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5% 감소하였다. 따라서 철강, 수산물, 의류, 광물성 연료, 광석 등 5개 품목들이 대중 수출총액의 80%(55백만 달러)를 차지하였고, 광물성 연료 중 석탄이 92%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아연(1백만 달러, 2,900.0% 증가), 알루미늄(0.8백만 달러, 19,150% 증가) 등 비금속 제품의 원자재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수산물, 비철금속 등 일부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즉, 의류제품은 9백만 달러로 41.3% 감소하였고, 광물성 연료는 1백만 달러로 61.3% 감소한 반면 수산물은 23백만 달러로 4.8% 증가하였고, 아연은 0.5백만 달러로 207.7% 증가하였으며, 알루미늄은 1.2백만 달러로 14.8%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수입의 경우, 중국은 식용육류, 광물성연료, 곡물, 전기기기 등 기존의 대중 수입의 주종품목들이 전체 수입액의 52.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중 가장 큰 비중(전체 수입액의 20.4%)을 차지한 식용육류는 26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28.7% 증가한 반면, 광물성 연료(22백만 달러, 47.9%감소), 곡물(5백만 달러, 61.0%감소), 전기기기(8백만 달러, 30.8%감소) 등의 품목은 감소하였다. 또한 광물성 연료중 석탄은 2백만 달러로 21.0% 증가한 반면, 원유는 세계적인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13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61.6% 감소하였다. 원유의 평균(1~3월 중) 수입단가는 0.23달러/kg로 전년 동기 0.20달러 대비 15.0% 상승하였다.

일본의 경우 북한의 대일수입 5개 주종 품목(일반차량, 전기기기, 기계류, 양모, 인조 필라멘트) 중 일반차량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전체 대일 수입의 6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 5대 품목의 수입액은 13백만 달러

로 전년동기 대비 15.1% 감소하였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1/4분기 대중·대일 교역은 일본인 납치자문제 등 북·일관계 악화지속에 따른 대일 교역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역의 증가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하였다. 북한의 수출주종품목인 수산물, 광물성 연료, 철강 등 원자재와 임가공 의류 등이 수출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금년 들어 중국의 경기 급등에 따른 건설 원자재 수요 증가와 가격인상 등에 기인, 철강과 아연 등 대중 원자재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식용육류, 식용채소, 과일, 비누 및 세제, 고무 등의 생필품 수입이 증가하고, 일본으로부터는 담배, 피아노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 김정일 생일(2.16) 등 행사용 수요 증가와 더불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주민생활의 안정도모를 위한 생필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으로부터 담배, 피아노, 컬러TV 수입증가는 일부 계층의 점차 고급화되고 있는 소비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담배수입은 0.3백만 달러(5,324.3% 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컬러TV는 28천 달러(600% 증가), 작년 같은 기간 중 수입이 없었던 피아노는 12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중국으로부터 트랙터(0.2백만 달러, 664.9% 증가) 및 유리(0.7백만 달러,

25.6% 증가)의 수입 증가는 평양시 개건 보수사업 등 최근 북한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는 영농기계화를 통한 농업 생산 증대 노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북한은 실리추구를 위한 광산물 등 원자재 수출과 공급부족문제 타개를 위한 소비재, 생필품 등의 수입에 주력할 전망이다.

IV.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북한 체제의 변화 및 전망

1.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개방

중국은 1978년 이래 줄곧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주요 성공요인으로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개혁의 목표를 확고하게 정리해 추진했다는 점이다. 즉, 중국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중국실정에 적합한 점진적인 개혁방식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가장 우선시 한 것은 농촌개혁으로서, 농촌에서의 개혁 성공을 점차 도시개혁으로 옮겨가는

개혁이 진행된 것이다. 또한 소유제 개혁에 있어서도 공유제로부터 시작해서 비공유제 경제를 발전시켰고, 그런 연후에 다시 공유제 경제를 개혁하였다. 또한 시장체제의 건립에 있어서도 상품시장을 먼저 발전시키고, 점진적으로 생산요소시장을 개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 및 경제개혁에 있어서 경제개혁 추진시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후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하에서 점진적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였다.

(2) 중국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해 초 개성공단 책임자 등 북한의 남북경협 주요 인사들과 함께 대거 중국 방문길에 나섰다.¹⁶⁾ 특히 이들은 상하이와 선전 등 중국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거점도시를 방문해 중국식 개혁의 실체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활동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북한식 개혁·개방 행보의 미래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북한은 개성공단을 경제특구로 하여 개발하여 침체될 때로 침체된 북한 경제의 돌파구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북한 대표단이 중국의 경제특구의 실체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을 방문한 것은 개성공단의 경제

16) 연합뉴스, 「북 대표단 중국행 의미와 전망」, 2004. 5. 26일자 내용참고.

특구 개발추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식 경제개방이 북한에서도 이루어 질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사인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은 과거 1990년대 초부터 나진·선봉사업의 추진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실패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2001년 중국을 방문하였고 그 이후 신의주특구 개발을 전격 추진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양빈' 해프닝으로 끝나고 결국 신의주특구 개발은 안개 속에 있다. 따라서 이번 개성공단에 거는 기대는 북한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즉 이번 중국행은 '개성공단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향후 북한의 과감한 개혁·개방의 행보가 어느 때보다 주목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중국이나 베트남은 공산당이 정치를 통제하면서도 경제는 상대적으로 개방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나 베트남식 시장경제시스템을 북한이 이행하고 있는가¹⁷⁾에 대한 답은 ▶변화가 실제적이지 않다, ▶변화는 실제적이지만 반복될 수 있다, ▶개혁은 실제적이며 돌이킬 수 없다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개혁방침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여전히 '강패국가'라는 이유로 첫 번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마침내 실용적인 경제정책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과거 베트남과 중국처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¹⁸⁾ 전문가들은 ▶햇볕정책 옹호자들이 전략적 정당성을 확보한 점, ▶국제사회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관측하기 시작한 점, ▶인도주의적 지원이 북한의 식량난을 경감할 것이라는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최종분석을 통해 북한의 현 실상이 무엇인지를 볼 준비를 해야 하며, 자신이 20년 전 북한을 공부하기 시작했을때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나타난 증거들은 북한이 중대한 경제개혁의 과정에 진입했다는 시각을 지지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스타일의 거시적인 정책이나 미시적인 법령을 손질하지 못했으며, 실용적인 경제개혁과 수출에 바탕을 둔 지속적인 경제부활은 북한에게 쉽게 앓은 문제라고 분석하였다.

17) 연합뉴스, 「북, 시장경제로 걸음마」, 2004. 5. 6일자 내용참고.

18) 연합뉴스, 「북한의 경제개혁 믿지 말라」, 2004. 4. 8일자 내용참고.

2. 북한 경제체제변화의 한계 및 전망

(1)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2003년도 북한은 핵 위기라는 악재 속에서 정치적으로 체제안정과 경제·사회적으로는 일정한 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시도한 한 해였다. 이 시기의 북한은 핵 문제로 불거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정치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면서 선군을 기치로 체제를 공고히 하고 주민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실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개혁과 주민 생활개선, 사회·문화적 변화 모색을 통해 대내외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3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2003년을 ‘선군기치에 따라 강성대국 영마루로 총진군해 나가는 대담한 공격전의 해, 거창한 변혁의 해’로 규정해 연초부터 9.9절 의미를 강조하였고 4월초에는 170여 개의 ‘당 구호’를 발표하여 주민들의 분발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정착에 노력하면서 주민생활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노력도 보였다. 즉, ‘7·1조치’의 영향으로 공장·기업소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났고 자본주의 마인드가 확산되었다. 또 ‘농민시장’의 명칭을 ‘시장’으로 바꾸고 공산품의 유통을 공식 인정하였으며, 일부 ‘개인상점’을 허용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식량배급제도를 전면 폐지하였는데, 이는 식량 소요량의 50%는 배급표를 발급받아 국정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50%를 개인이 시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국정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했던 50% 분량까지도 개인이 자력으로 조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북한의 변화는 식량부족에 따른 배급제 중단이라기보다는 시장기능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2003년 3월 이후 종합시장을 설치하여 농산품과 공산품의 유통을 허용하는 등 유통제도를 손질하는데 주력해 왔다. 한편 북한은 국경지역의 통행을 쉽게 하고 외국산 식량도입에 무관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식량가격을 시장에 맡기는 상황에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 2003년부터 에너지 수급 3개년 계획(2003~2005년), 800만 톤 식량증산 5개년 계획(2003~2007년), 그리고 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3~2007년) 등 에너지와 식량,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가시적인 북한정권의 노력은 지난 45년부터 추진해 왔던 엄격한 시장통제경제를 완화하는 개혁정책을 발표한 지 2

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인구 2천200만의 북한, 특히 최소한의 특권층이 모인 것으로 평가되는 인구 220만의 평양이 소비주의의 맛을 느끼고 있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식량난, 만성적인 영양실조, 사회간접자본재의 노후화 등으로 재난의 문턱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약하나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거리마다 나이 많은 여성이 농산품을 팔거나 신발을 수선하는 등 개인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시내 전역에서 판지로 만든 소규모 상점들이 모습을 드러내 음료수와 담배, 사탕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점들은¹⁹⁾ 통일거리 시장에서의와 같이 정부 산하의 소규모 무역회사, 노동자·농민조합 등이 운영하는 것이지만 가격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고 있다. 구매자들은 쿠폰이 아니라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며 판매상들은 이윤을 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고가의 휴대전화를 소유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한국을 경유해 북한에 반입된 이탈리아 피아트 자동차 부품으로 만든 ‘휘파람’자동차에 대한 광고판도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다음은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전망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2) 북한 경제체제의 한계와 전망

북한에서의 변화방향은 체제개혁보다는 경제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점진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움직여 왔다. 그러므로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이중적 딜레마에 처해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²⁰⁾.

그러나 존스 홉킨스 대학 부설 니체첨단국제연구소의 돈 오버도퍼는 “경제변화가 수 개월간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북한 내 유일한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변화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아직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북한이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 외부세계와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국제금융기구들의 지원을 받게 될지 여부를 말하기는 이르다면서 “이런 일은 한반도 핵 긴장이 완화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돈 오버도퍼의 견해에서의와 같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한계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핵 긴장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

19) 연합뉴스, 「북, 시장경제로 걸음마」, 2004. 5. 6일자 내용참고.

20) 양재성,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통일부 유니코리아, 2004. 6.

이 뚜렷이 거론된다면 북한 체제의 변화는 한걸음 더 진일보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즉 북한은 2002년 7·1조치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변화를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실질적이며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반도 핵 긴장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남북장관급회담 등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개혁에 동조하지 못하는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핵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의 경제개혁은 순풍에 돛 달 듯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북한의 만성적인 문제들도 자연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02년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분위기 조성을 이행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북·일 정상회담 개최」, 「금강산관광지구법 제정」, 「개성공업지구법 제정」등 경제개혁·개방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갔다. 이렇게 북한체제의 변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북한내부에 상존하

고 있는데, 그와 같은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²¹⁾.

첫째,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경제체제 및 사회체제로는 시장 경제체제로 단일화되어 가는 국제정세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2001년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가자”는 이른바 ‘신사고론’이나 상하이를 방문한 점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외환경적 측면에서 북한은 구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외교적·정치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외부, 즉 남한이나 서방국가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한은 탈냉전과 개방화의 주변 환경 변화에 부응해 나가야 생존할 수 있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첫째, 북한은 체제 결속을 위해 군이 중심이 되어 주민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북한과 같은 통제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른바 ‘신사고’를 주장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변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인데, 이를 가늠하기

21) 양재성, 앞의 글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3가지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²⁾ 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관한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한다. 즉, 북한은 정전협정에 기초한 북-미간 '교전관계'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지 않으면 언제 미국으로부터 정권과 체제붕괴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즉,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개혁·개방을 본격화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실제 북한은 개혁·개방의 전제조건 차원에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분단체제의 구조적 모순이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제로섬적인 분단체제에서 개혁·개방은 곧 남한으로 흡수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동안 북한당국이 정책변화를 주저해왔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의 새정부와 남북화해협력을 가속화하고 남북관계발전을 제도화해야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김일성-김정일 부자승계체제에 따른 태생적 한계란 걸림돌을 극복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 경험에 따르면 지도자의 교체기에 새로운 지도부가 전임지도자에 대한 비판, 공산당의 혁명과 건

설에 대한 재평가, 새로운 정책노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부자승계에 따른 태생적 한계로 새로운 정책노력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걸림돌들이 제거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가 양립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북한체제가 편입하지 않는다면 북한 체제 자체의 존립여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V. 결 언

최근 북한에 24시간 편의점이 등장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번에 북한에 개점한 편의점에서는 빵, 우유, 맥주, 담배 등 식료 잡화와 꽃, 가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외국대사관과 상업대표부들이 밀집해 있는 평양 문수동에 생겨난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체제를 생각해 본다면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이라는 측면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또 다른 예를 보면 비무장 지대 인근 개성에서 지난 22개월 간 1억8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자본주

22) 양재성, 앞의 글

의에 대한 싹이 돋아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개성공단 시범단지내 남한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서는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달러로 지불하고,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 지역의 장기적 계획에 따라 2020년 경 놀이공원까지 들어서게 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예로상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북한의 대부분 공장들은 이윤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고 공산당 간부보다 경영자들에게 결정권이 위임되며, 평양의 중앙은행은

국영기업에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²³⁾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는 단시일내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겨 경제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개혁·개방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체제 개혁은 필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 중 가장 성공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한 중국과 베트남을 모델로 삼아 경제체제 개혁을 이행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된다. ◆

23) KOTRA, 「북한에 확산되는 자본주의 맹아」, KOTRA 북한경제속보, 2004. 5. 28일자 내용참고.

〈참고문헌〉

-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1)”, 『사회과학논문집』 제15호, 『KDI 북한경제리뷰』, 2002년.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김명철, “생산의 정상화 보장을 위한 공업기업소 전투계획화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001년 제2호, 과학백과출판사(평양).
- 김진향, “북한경제의 위기와 대응: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본질과 전망”, 『한국동북아 논총』 제26집, 2003.
- 리동구, “경제를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본성적 요구”, 『경제연구』, 1998년 4호.
- 리창혁, “우리 당에 의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고수와 경제강국건설의 성과적 추진”, 『경제연구』, 2001년 4호.
- 양재성,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통일부 유니코리아, 2004년.
- 연합뉴스, 「북 대표단 중국행 의미와 전망」, 2004년.
- _____, 「북, 시장경제로 걸음마」, 2004년.
- _____, 「북한의 경제개혁 믿지 말라」, 2004년.
- 정세진, “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경제 변화 연구”, 『국제정치논집』 제43집, 2003년.
- 조영기, 『김정일 시대의 경제관리정책의 특징』, 건국대학교, 2004년.
- 통일부, “2001년도 북한의 물가동향 조사결과”, 2001. 12. 14.
- KOTRA, 「北 경제, 시장경제 진입 가능한가?」, KOTRA 북한경제 속보, 2004년.
- _____, 북한경제정보, 북한알기, 2004년.
- _____, 해외무역관 보고, 2004년.
- _____, 「북한 2003년 대외무역, 최근 10년내 최대」, KOTRA 북한경제속보, 2004년.
- _____, 「북한에 확산되는 자본주의 맹아」, KOTRA 북한경제속보, 2004년.